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연구진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필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CONTENT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인천광역시 지역고용시장 현황

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06
2. 인천광역시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수	07
3. 인천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09
4. 인천광역시 계층별 고용지표	10
5. 인천광역시 근로조건	13

III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규모	14
2.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16
3.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17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20
5. 시사점	28

IV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의제

1. 비정규직 관련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과 과제	30
2.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제	3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은 1981년 직할시, 1995년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며, 1979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91년 200만 명을 넘어 2018년 이후 300만 명을 넘는 도시로 성장함
 -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 300만 명 도시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구규모 64번째로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메가도시’가 되었음
- 산업적 측면에 있어 1960년 부평, 계양 산업단지, 1980년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표적 생산도시로 성장하면서, 인천공항 개항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출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신규(新舊) 도심의 불균형적 발전,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및 노동조건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면이 나타나고 있음
-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됨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국정과제를 포함시킴
 - 과제의 목표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외주근로자와 감정노동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음
 - 주요한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원청 공동 사용자 책임, 임금격차 해소,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등이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음

-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노동자의 권익신장, 비정규직 남용방지, 근로자 처우개선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삶의 질 제고 등을 추진함
 - 민간부문에서는 무료상담소 운영을 통한 노무 및 법률 상담 지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원 등을 추진함
- 인천광역시는 민선7기 들어 ‘노동존중 인천특별 시대’ 구현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과 차별개선 정책으로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인천실정에 맞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 설정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고용시장 현황

1.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 15세 이상 인구는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64만 5천 명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157만 명과 실업자 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이후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인구는 10만 명, 취업자 수는 10만 명이 증가함
- 2018년 실업률은 4.3%이며 15세~64세의 고용률은 68.6%임
 - 2015년 이후 실업률 지표와 고용률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2015년 5.0%에서 4.3%로 감소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65.9%에서 68.6%로 증가함

| 인천광역시 노동시장 주요지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5세 이상 인구(천 명)	2,403	2,433	2,461	2,485	2,503
경제활동 인구(천 명)	1,544	1,567	1,598	1,607	1,645
취업자(천 명)	1,472	1,488	1,520	1,533	1,575
실업자(천 명)	72	79	78	75	70
비경제활동 인구(천 명)	858	867	863	878	858
경제활동 참가율(%)	64.3	64.4	64.9	64.7	65.7
실업률(%)	4.7	5.0	4.9	4.6	4.3
고용률(%)	61.3	61.1	61.8	61.7	62.9
15~64세 고용률(%)	65.4	65.9	67.2	67.3	68.6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2. 인천광역시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수

- 2018년 2/2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1,581천 명임
 - 제조업이 347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230천 명), 건설업(14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0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116천 명), 운수 및 창고업(97천 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93천 명)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수 동향 |

(단위 : 천 명)

산업별	2016년 2/2분기		2017년 2/2분기		2018년 2/2분기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계	26,746	1,527	27,026	1,560	27,090	1,581
농업, 임업 및 어업	1,420	4	1,435	3	1,493	8
광업	21	0	23	1	15	0
제조업	4,547	350	4,560	362	4,515	34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1	3	68	3	63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5	7	113	6	139	9
건설업	1,908	147	2,030	133	2,090	145
도매 및 소매업	3,754	214	3,799	225	3,699	230
운수 및 창고업	1,414	107	1,407	99	1,412	97
숙박 및 음식점업	2,314	120	2,286	123	2,189	116
정보통신업	790	38	782	38	863	40
금융 및 보험업	814	44	805	45	854	52
부동산업	498	24	534	29	538	31

산업별	2016년 2/2분기		2017년 2/2분기		2018년 2/2분기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7	44	1,090	46	1,096	5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12	114	1,371	96	1,281	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30	45	1,115	48	1,146	43
교육 서비스업	1,881	83	1,885	93	1,870	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3	97	1,990	107	2,149	1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4	20	433	24	432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4	65	1,231	76	1,198	6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65	2	59	3	41	4
국제 및 외국기관	14	0	12	0	7	0

출처 : 지역별 고용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8년 2/2분기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취업자 1,581천 명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가 29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3천 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19천 명), 단순노무 종사자(214천 명), 판매 종사자(207천 명), 서비스 종사자(175천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64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리자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서비스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단순노무종사자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인천광역시 직업별 취업자 수 동향 |

(단위 : 천 명)

직업별	2016년 2/2분기		2017년 2/2분기		2018년 2/2분기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계	26,746	1,527	27,026	1,560	27,090	1,581
관리자	326	14	323	6	389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60	271	5,452	292	5,504	283
사무 종사자	4,577	267	4,687	287	4,804	295
서비스 종사자	2,948	159	2,977	173	2,954	175
판매 종사자	3,110	189	3,074	184	3,035	2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23	4	1,338	6	1,410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393	166	2,362	155	2,392	16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187	240	3,159	221	3,041	219
단순노무 종사자	3,521	219	3,654	237	3,561	214

출처 : 지역별 고용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3. 인천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통계청에서 발표된 사업체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 2,017,707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7,736,22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96,985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842,53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

(단위 : 개, 명)

산업분류	전국		인천광역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2,017,707	17,736,224	96,985	842,534
농업, 임업 및 어업	3,687	37,343	31	256
광업	1,026	13,910	31	627
제조업	294,545	3,928,555	18,236	243,2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52	62,174	58	3,79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931	87,048	405	6,836
건설업	111,152	1,400,437	4,144	48,702
도매 및 소매업	475,087	2,466,848	21,700	111,241
운수 및 창고업	41,844	767,825	2,980	55,695
숙박 및 음식점업	371,571	1,654,493	17,312	78,170
정보통신업	33,576	524,008	658	7,039
금융 및 보험업	39,558	721,437	1,604	26,060
부동산업	73,894	420,047	3,528	17,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267	974,788	2,655	25,6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8,672	1,158,747	2,032	45,414
교육 서비스업	95,615	893,714	4,604	37,2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598	1,736,436	7,062	93,7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7,923	299,299	2,306	13,4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3,209	589,115	7,639	28,298

출처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4. 인천광역시 계층별 고용지표

청년층

- 인천광역시의 청년층(연령 15~29세) 인구는 2017년에 53만 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6만 7천 명이며, 취업자 수는 23만 9천 명으로 실업률은 10.5%로 나타남



- 15~29세의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이후 10%를 초과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실업률 보다 소폭 높은 추세임

|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주요지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15~29세 인구(천 명)	540	538	534	530
경제활동 인구(천 명)	255	257	268	267
비경제활동 인구(천 명)	285	280	267	263
취업자 수(천 명)	224	227	237	239
실업자 수(천 명)	31	31	31	28
경제활동 참가율(%)	47.2	47.9	50.1	50.4
고용률(%)	41.5	42.2	44.4	45.1
실업률(%)	12.1	11.8	11.5	10.5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여성층

- 인천광역시의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017년에 125만 명이며 67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나타남. 취업자는 64만 명으로 실업률은 3.8%임
- 지난 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2.5%에서 2017년 53.3% 수준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여성실업률은 2014년에 5.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광역시 여성 노동시장 주요지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15세 이상 인구(천 명)	1,216	1,232	1,247	1,259
경제활동 인구(천 명)	649	654	667	670
비경제활동 인구(천 명)	567	577	580	588
취업자 수(천 명)	616	623	637	645
실업자 수(천 명)	33	31	30	25
경제활동 참가율(%)	53.3	53.1	53.5	53.3
고용률(%)	50.6	50.6	51.1	51.2
실업률(%)	5.1	4.8	4.5	3.8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고령층

- 인천광역시의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17년에 50만 명이며 2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39.7%로 나타남. 취업자는 19만 명으로 실업률은 4.8%임
 - 지난 5년간 고령층 인구, 경제활동에 참여 인원,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자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자 실업률은 2014년 3.9%에서 2016년 6.2%로 증가하였고, 2017년 4.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전국의 고령자 실업률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고령층 노동시장 주요지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60세 이상 인구(천 명)	415	444	474	505
경제활동 인구(천 명)	168	182	189	200
비경제활동 인구(천 명)	247	262	285	305
취업자 수(천 명)	162	173	177	191
실업자 수(천 명)	7	9	12	10
경제활동 참가율(%)	40.5	41.0	39.8	39.7
고용률(%)	38.9	38.9	37.4	37.8
실업률(%)	3.9	5.2	6.2	4.8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5. 인천광역시 근로조건

- 인천광역시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2018년 월 평균 임금(상용 월급여액)은 301만 원으로 나타남. 전국 월 평균임금(상용월급여액) 326만 원에 비해 약 25만 원 가량 낮은 금액 수준임
 - 월 평균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월 평균임금은 2016년 284만 원에서 2018년 301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함
 - 상용정액급여는 2016년 257만 원에서 2018년 278만 원으로 21만 원 증가함
- 인천광역시 상용근로자의 2018년 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나타남. 전국 월 평균 총근로시간인 176.3시간에 비해 약 2.8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어졌으나, 2017년의 경우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의 월 평균 총근로시간이 약 4.7시간 더 길었던 것이 비해 2018년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일수, 상용총근로시간, 상용실근로시간은 2017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상용초과근로시간은 2016년 17.1시간, 2017년 14.8시간, 2018년 12.4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전국	인천광역시
상용근로일수(일)	20.8	21.2	20.5	20.8	21.1	21.3
상용총근로시간(시간)	176.7	183.1	173.2	177.9	176.3	179.1
상용소정 실근로시간(시간)	163.7	166.1	160.9	163.0	165.3	166.7
상용초과 근로시간(시간)	13.1	17.1	12.3	14.8	11.0	12.4
상용월급여액(원)	3,030,286	2,839,944	3,125,273	2,913,439	3,259,281	3,013,149
상용정액급여(원)	2,801,094	2,568,682	2,896,038	2,665,555	3,030,795	2,780,194
상용초과급여(원)	229,192	271,262	229,235	247,884	228,486	232,955
상용특별급여(원)	386,170	308,989	395,787	318,309	374,381	299,665

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¹⁾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규모

- 통계청이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자료로 각 시도별 비정규직²⁾ 노동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1,261천 명 중 비정규직은 404천 명으로 약 32.0%로 나타남
 -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 33.0%에 비해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32.0%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27.4%)와 세종특별자치시(28.6%)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43.4%)와 전라북도(42.5%)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대구광역시(30.8%), 부산광역시(31.3%)의 뒤를 잇고 있으며, 서울특별시(33.5%), 광주광역시(35.6%), 대전광역시(38.5%)는 인천광역시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본 장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통계자료가 지역별로 발표되지 않는 관계로 김철홍(2017)의 지역별 분석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였음

2)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상은 한시적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비전형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시도별 비정규직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음. 실제 해당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를 알 수 없으나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는 해당 하청의 정규직(상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의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

(단위: 천 명)

시도별	2017년 8월				2018년 8월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³⁾	비율(%)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계	20,006	13,428	6,578	32.9	20,045	13,431	6,614	33.0
서울특별시	4,103	2,713	1,390	33.9	4,055	2,697	1,358	33.5
부산광역시	1,326	886	440	33.2	1,299	892	407	31.3
대구광역시	895	607	288	32.2	892	617	275	30.8
인천광역시	1,228	842	386	31.4	1,261	857	404	32.0
광주광역시	566	357	209	36.9	579	373	206	35.6
대전광역시	603	406	197	32.7	582	358	224	38.5
울산광역시	463	328	134	28.9	475	324	152	32.0
세종특별자치시	107	73	34	31.8	126	90	36	28.6
경기도	5,248	3,655	1,593	30.4	5,315	3,654	1,662	31.3
강원도	547	293	254	46.4	549	311	238	43.4
충청북도	605	405	200	33.1	623	414	210	33.7
충청남도	802	531	271	33.8	818	525	292	35.7
전라북도	598	353	245	41.0	600	345	255	42.5
전라남도	572	355	217	37.9	583	370	213	36.5
경상북도	925	619	306	33.1	890	618	272	30.6
경상남도	1,162	848	314	27.0	1,155	838	317	27.4
제주도	258	157	101	39.1	244	148	95	38.9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3) 통계청 비정규직 노동자 분류구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비전형노동자 등으로 분류됨
- ① 한시적노동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노동자(기간제 노동자) 또는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비기간제노동자)를 포함
 - ② 시간제노동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③ 비전형노동자 :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노동자, 일일(단기)노동자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로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종 통계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가통계에서는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약 33.0%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단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대략 44~50%로 보고 있으며, 그 숫자는 800~9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 인천광역시의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이 81%로 전국 비율 74.6% 보다 높은 편이며, 전체 인구 중 임금소득의 비중이 높은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용 조건과 실직상태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일용노동자의 비율은 변동은 있으나 전국 수준과 비슷하며, 전체 취업자의 약 5% 정도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임금노동자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노동자로 구분되어 대체적으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
 - ① 상용노동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② 임시노동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③ 일용노동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

(단위: 천명, %)

구분	종사상 지위	2017년		2018년 1/4분기		2018년 2/4분기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전국	계	26,724.8	100	26,283.3	100	27,019.2	100
	비임금노동자	6,791.0	25.4	6,541.9	24.9	6,860.5	25.4
	* 자영업자	5,681.5	21.3	5,559.2	21.2	5,706.9	21.1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7.7	6.0	1,659.8	6.3	1,647.2	6.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3.7	15.2	3,899.5	14.8	4,059.7	15.0
	* 무급가족종사자	1,109.5	4.2	982.7	3.7	1,153.6	4.3
	임금노동자	19,933.9	74.6	19,741.3	75.1	20,158.7	74.6
	- 상용노동자	13,427.5	50.2	13,667.5	52.0	13,729.9	50.8
	- 임시노동자	4,992.0	18.7	4,682.9	17.8	4,967.5	18.4
	* 일용노동자	1,514.3	5.7	1,391.0	5.3	1,461.3	5.4
	계	1,532.5	100	1,550.9	100	1,581.3	100.0
	비임금노동자	292.8	19.1	307.3	19.8	314.4	19.9
	* 자영업자	259.4	16.9	271.8	17.5	274.7	17.4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5.3	5.6	94.1	6.1	102.7	6.5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4.1	11.4	177.7	11.5	172.0	10.9	
* 무급가족종사자	33.3	2.2	35.5	2.3	39.7	2.5	
임금노동자	1,239.7	80.9	1,243.6	80.2	1,267.0	80.1	
- 상용노동자	788.5	51.5	816.9	52.7	819.9	51.8	
- 임시노동자	357.1	23.3	343.3	22.1	369.0	23.3	
* 일용노동자	94.1	6.1	83.4	5.4	78.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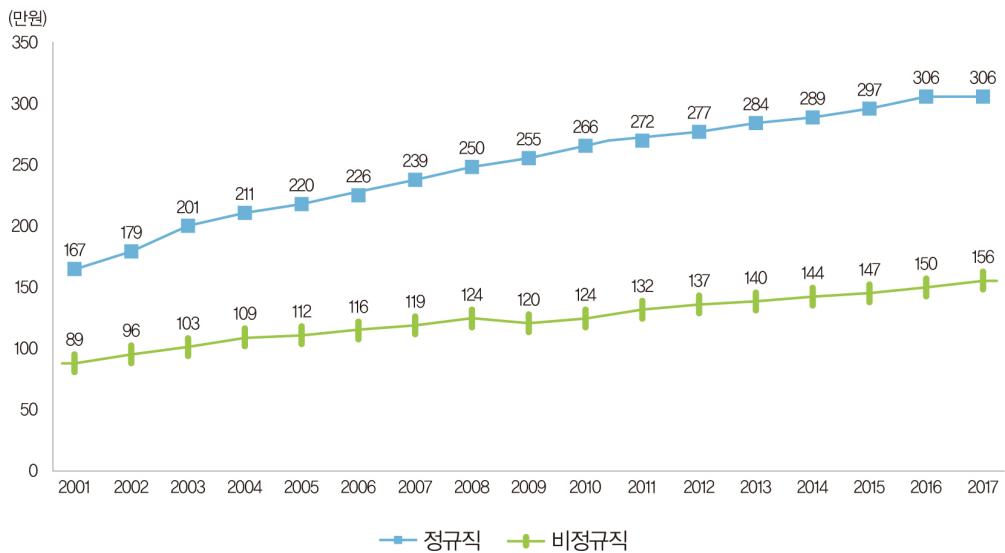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3.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 통계청에서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서 임금노동자의 근로형태 및 규모, 임금 수준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를 시도별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인천광역시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으며,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고 1업체당 평균 고용규모가 3명에 불과한 서비스업종 비중이 높음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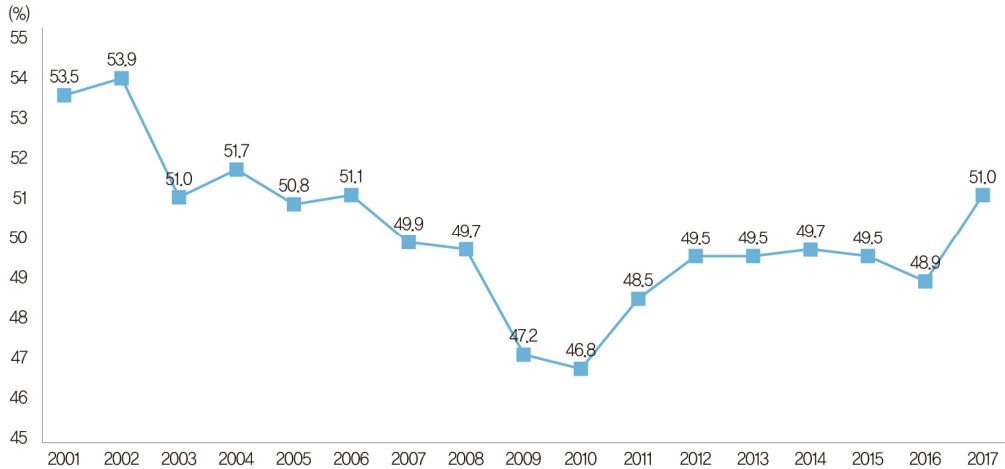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전국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유사하거나 전국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준을 통해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추정해 보았을 때,
 - 2017년 8월 기준 임금은 정규직이 306만 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원으로 50%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 또한, 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8년 정도임에 반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2.5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임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임금노동자에게 안정된 직장은 삶의 안정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근속년수가 짧은 만큼 삶이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월평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2017년 8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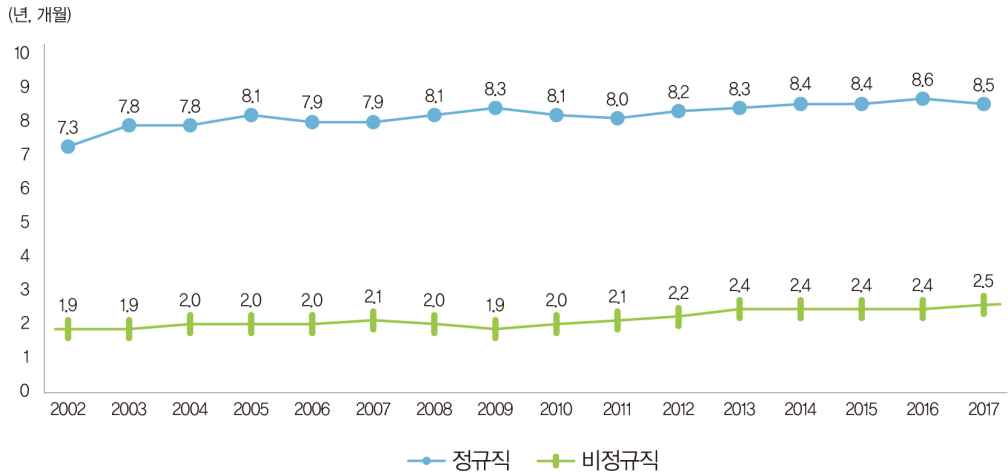
출처 : 통계로 본 비정규직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비율 추이(2017년 8월 기준)



출처 : 통계로 본 비정규직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 2)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2017년 8월 기준)



출처 : 통계로 본 비정규직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 2)

- 또한 전국 임금노동자 전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통해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을 추정해보면,

-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70% 정도이며,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보험에 따라 85~98% 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2%, 건강보험 41%, 고용보험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무하는 동안에도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직상태에 있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7년 8월 기준) |

(단위 : %)

구분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전체		69.0	74.2	65.7
정규직 여부	정규직	95.9	98.8	84.5
	비정규직	32.4	40.7	40.1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28.5	35.0	37.7
	기간제	66.8	77.4	72.7
	상용파트	80.6	94.9	86.9
	임시파트	10.5	12.8	16.2
	호출노동	0.1	0.1	4.6
	특수고용	6.6	7.5	8.6
	파견노동	58.1	71.4	68.2
	용역노동	40.1	75.6	61.2
	재택노동	22.0	22.8	17.9

출처 : 통계로 본 비정규직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2)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인천지역 근로자 상담현황을 통한 노동실태 분석⁴⁾

-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지역별로 발표되지 않는 만큼, 인천광역시 지역 근로자의 노동

4) 김철홍 외(2017)의 내용을 인용 및 재구성



실태 분석을 위해 인천지역 노동상담소의 연도별 상담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의 노동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

| 인천지역 근로자 노동상담 통계(2015~201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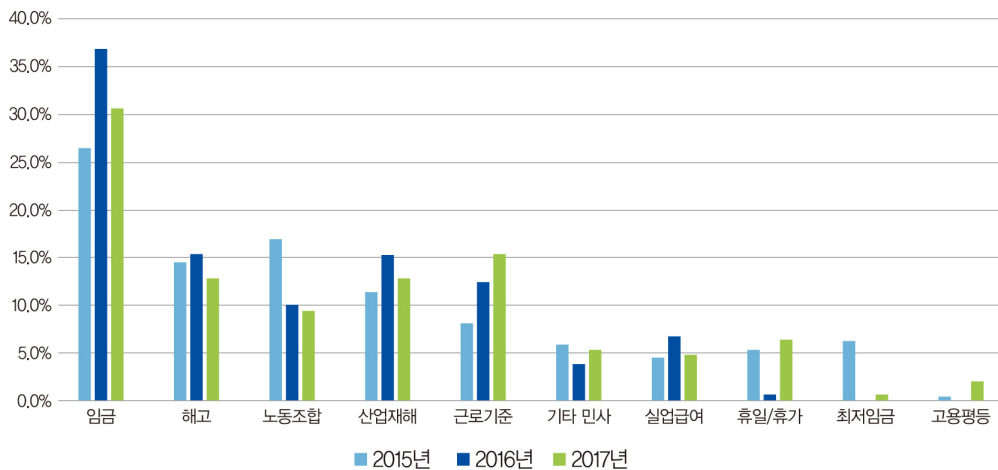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계 (비율)	일반	비정규직 (비율)	계 (비율)	일반	비정규직 (비율)	계 (비율)	일반	비정규직 (비율)
합계	934 (100)	581	353 (37.8)	991 (100)	961	30 (3)	1,196 (100)	605	518 (43)
임금	248 (26.6)	141	107 (43.1)	364 (36.7)	352	12 (3.3)	363 (30.4)	200	154 (42)
휴일/휴가	49 (5.2)	29	20 (40.8)	8 (0.8)	8	-	76 (6.4)	46	19 (25)
근로기준	76 (8.1)	47	29 (38.2)	116 (11.7)	113	3 (2.6)	183 (15.3)	85	81 (44)
고용평등	4 (0.4)	3	1 (25)	-	-	-	26 (2.2)	4	22 (85)
해고	137 (14.7)	82	55 (40.1)	153 (15.4)	145	8 (5.2)	155 (13)	78	70 (45)
노동조합	156 (16.7)	108	48 (30.8)	100 (10.1)	98	2 (2)	111 (9.3)	62	42 (38)
실업급여	42 (4.5)	34	8 (19)	63 (6.4)	60	3 (4.8)	60 (5)	30	17 (28)
최저임금	58 (6.2)	34	24 (41.4)	-	-	-	8 (0.7)	7	1 (13)
산업재해	108 (11.6)	58	50 (46.3)	151 (15.2)	149	2 (1.3)	148 (12.4)	65	83 (56)
기타 민사	56 (6)	45	11 (19.6)	36 (3.6)	36	-	66 (5.5)	28	29 (44)

출처 : 인천광역시(2018),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의제 발굴(재구성)

- 2015~2017년 인천지역 노동상담 통계에서 각각의 상담항목을 분류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임금 : 단순체불, 임금계산, 임금체불 청구 절차 등
 - 휴일/휴가 : 휴일 또는 휴가에 관한 권리, 청구 절차, 청구 거절 시 대응 포함
 - 근로기준 : 강제근로, 공민권 행사,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관련 등

- 고용평등 : 성차별, 여성/모성 보호 관련, 고용보험 상 모성보호 급여 포함
- 해고 :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사직 강요, 권고사직 포함
- 노동조합 : 노조 가입/설립, 총회 등 노조 운영, 단체교섭/단체행동, 복수노조 관련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등 각종 실업급여 수급 요건, 청구 절차 등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액 및 계산방법 안내 포함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절차, 직업성 질병, 불인정 후 불복 절차, 각종 산재 급여 관련
- 기타 민사 : 노동문제 외 인권/차별 문제, 개인 간 채권채무 등 노동 이외의 각종 상담

| 인천지역 근로자 노동상담 통계(2015~2017년) |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상담소에서는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5~2017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근로기준의 순으로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임금이 약 30%로 다른 상담 항목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 실업급여, 휴일/휴가, 최저임금과 고용평등에 대한 상담비중은 전체의 5% 미만으로 비교적 근로자들의 관심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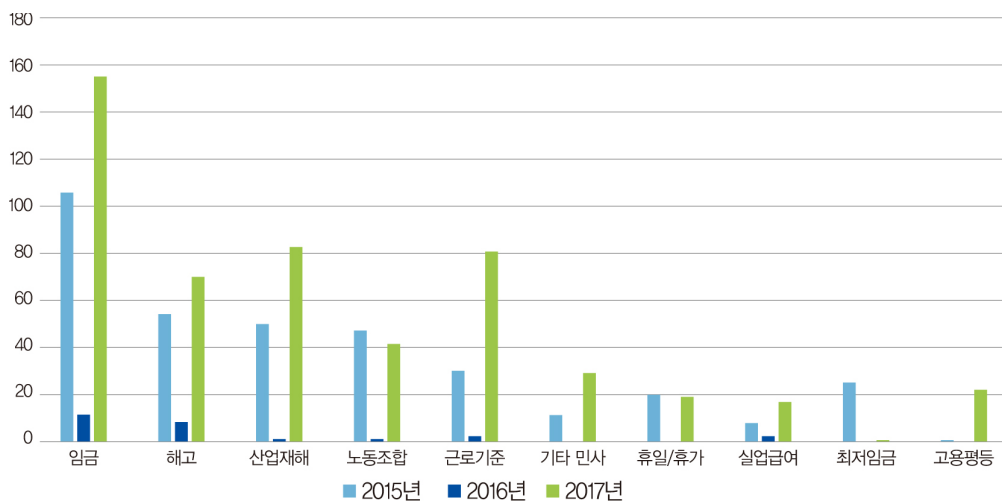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통계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표를 재구성하면 아래의 표 및 그림과 같이 나타남

|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상담 건수(2015~2017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353	30	518
임금	107	12	154
휴일/휴가	20	0	19
근로기준	29	3	81
고용평등	1	0	22
해고	55	8	70
노동조합	48	2	42
실업급여	8	3	17
최저임금	24	0	1
산업재해	50	2	83
기타 민사	11	0	29

|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상담 건수(2015~201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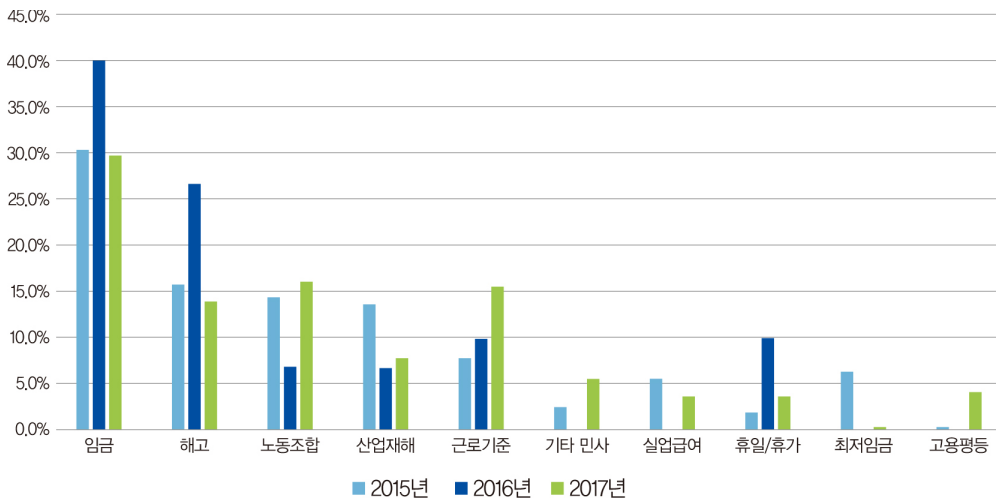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 건수는 임금,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근로기준, 휴일/휴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80%를 상회하여 상담 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근로자의 상담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임
 - 다만 2016년에는 비정규직 상담 건수가 다른 때에 비해 10% 미만으로 매우 적은 상담 건수를 보이는데 이는 비정규직만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상담소 노무사 교체 등 노동상담소 내부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상담 항목별 비율(2015~2017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임금	30.3%	40.0%	29.7%
해고	15.6%	26.7%	13.5%
산업재해	14.2%	6.7%	16.0%
노동조합	13.6%	6.7%	8.1%
근로기준	8.2%	10.0%	15.6%
기타 민사	3.1%	0.0%	5.6%
휴일/휴가	5.7%	0.0%	3.7%
실업급여	2.3%	10.0%	3.3%
최저임금	6.8%	0.0%	0.2%
고용평등	0.3%	0.0%	4.2%

|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상담 항목별 비율(2015~2017년) |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상당 항목별 비율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비율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임금이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근로기준의 4가지 항목이 그 뒤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표명하여 일상적으로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는 현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중단할 것을 결정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이 정책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 기관(지자체,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2단계는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재는 1,2단계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실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공개자료 |

구분	전체(기간제+파견용역)						기간제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인천 소계	3,204	2,044	630	330	323		1,424	768	169	265	261	
인천시청	844	685	504	94	89	부분 확정	457	298	117	94	89	부분 확정
강화군청	191	45	0	139	141	전체 확정	191	45	0	139	141	전체 확정
계양구청	310	85	15	0	0	미확정	310	85	15	0	0	미확정
남동구청	245	124	7	15	14	부분 확정	245	124	7	15	14	부분 확정
부평구청	349	344	30	17	17	부분 확정	221	216	30	17	17	부분 확정

구분	전체(기간제+파견용역)						기간제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연수구청	253	72	15	44	42	부분 확정	205	29	15	4	2	부분 확정
옹진구청	217	163	0	9	9	부분 확정	204	150	0	9	9	부분 확정
남구청	234	213	12	12	11	부분 확정	225	204	12	12	11	부분 확정
동구청	146	31	5	0	0	미확정	121	7	5	0	0	미확정
서구청	224	154	27	0	0	미확정	224	154	27	0	0	미확정
중구청	191	128	15	0	0	미확정	167	106	15	0	0	미확정

출처 : 고용노동부(2018. 12 기준)

- 인천지역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전체 비정규직 3,204명 중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2,044명으로 나타남
- 이 중 현재 전환 추진 중인 기간제 종사자는 1,418명에 해당하며 그 중 전환하기로 계획한 인원은 243명(17.1%),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290명(20.5%), 실제로 전환된 인원은 283명(20.0%)에 불과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지자체인 인천시청만 보더라도, 기간제 457명 중 상시지속 업무자는 298명이며, 해당 인원 중 전환하기로 계획한 인원은 117명(40%),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94명(31.5%), 실제로 전환된 인원은 89명(30%)에 불과함



|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공개자료 |

구분	전체(기간제+파견용역)						기간제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총계	상시 지속	계획 인원	전환 결정	전환 완료	진행 상황
인천 소계	1,802	1,409	619	490	379	전체 확정	1,201	893	303	193	192	전체 확정
인천관광공사	116	103	7	6	6	전체 확정	1	1	0	1	1	전체 확정
인천교통공사	474	376	251	250	146	부분 확정	114	86	0	0	0	전체 확정
인천도시공사	36	36	16	24	21	전체 확정	25	25	5	5	5	전체 확정
인천환경공단	108	80	38	41	39	전체 확정	89	63	35	33	33	전체 확정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50	43	23	22	22	전체 확정	50	43	23	22	22	전체 확정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76	76	72	14	12	전체 확정	76	76	72	14	12	전체 확정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9	28	0	0	0	전체 확정	29	28	0	0	0	전체 확정
남구 시설관리공단	1	1	1	1	0	전체 확정	1	1	1	1	0	전체 확정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36	36	23	23	23	전체 확정	36	36	23	23	23	전체 확정
서구 시설관리공단	127	86	81	35	35	전체 확정	127	86	81	35	35	전체 확정
시설관리공단	716	511	98	65	66	부분 확정	620	415	54	50	52	전체 확정
중구 시설관리공단	33	33	9	9	9	전체 확정	33	33	9	9	9	전체 확정

- 인천시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802명 중 상시지속 업무자는 1,409명이며, 해당 인원 중 전환하기로 계획한 인원은 619(43.9%)명,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490(34.8%)명, 이미 전환 완료된 인원은 379(26.9%)명에 불과함

- 또한, 기간제 1,201명 중 상시지속 업무자는 893명이며, 해당 인원 중 전환하기로 계획한 인원은 303명(34.0%),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93명(21.6%), 실제로 전환된 인원은 192명(21.5%)에 불과함
- 전환된 인원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이 늦어지게 되거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실제 상시 지속업무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전환 예산 등을 이유로 전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규직 직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거나, 전환 예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국회토론회, 2018. 3)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5. 시사점

-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지리적·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임업 및 어업 기반이 약한 반면에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산업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구조는 타 광역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를 보면 2016년 3월 375천 명에서 2016년 8월 413천 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8월 386천 명으로 감소 그리고 2018년 8월 404천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비정규직 비율로 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6년 3월 30.8%에서 2016년 8월 33.0%로 증가했다가 2017년 8월 31.4%로 감소한 이후 2018년 8월 32.0%로 다시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3월 32.0%에서 2016년 8월 32.8%, 2017년 8월 32.9%, 2018년 8월 33.0%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와 전국평균 비정규직 비율의 편차는 2016년 8월 전국평균보다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0.2%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 2018년 8월까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와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수준을 통해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추정해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0% 수준으로 열악하고,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2.5년에 불과한 것(정규직은 약 8년)으로 나타남
 - 상용직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월급여는 전국 비정규직 임금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 인천지역 노동상담소의 연도별 상담 자료를 통한 노동실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건수는 임금,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근로기준, 휴일/휴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80%를 상회하여 비정규직의 노동실태에 대한 주 관심사를 알 수 있음
-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기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단기간에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은 비용절감·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여성·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복지후생 등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IV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의제

1. 비정규직 관련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과 과제

-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지방관서를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집행되며, 지방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수입행정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노동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과 근로자복지회관과 같은 복지·근린시설 운영·관리에 머물러 있음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한계를 노정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노동행정의 인력과 재원이 중앙집권적으로 편재된 행정체계로 인해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전담부서를 두기 어려움
 - 노동정책이 국가 사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
 -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위상이 낮게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정책 내지 복지정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기업별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와 지역 노조의 발달 미흡
 -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의 현안 대응 수준에 머무르는 현상
- 한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노동권익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조례에 근거한 노동정책의 입안과 집행 필요
 - 둘째, 노동정책의 실효적인 입안과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필요



- 셋째, 노동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질적 역할 수행 필요

|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개선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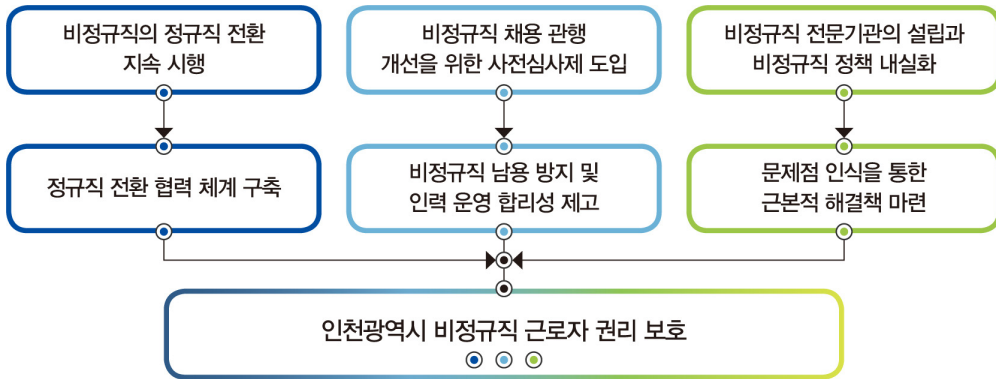
구분	내용
노광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 : 소속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사업과 관급 공사 관련 고용관계에 대한 모범사용자로서 책임 ②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확충 ③ 지역 노동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내실화 ④ 노동조합의 지역 전략 수립과 실행
김성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순 집행을 넘어선 지역 고용전략 수립 ② 질 좋은 일자리에 관한 인식 전환 ③ 고용-산업-복지 정책을 노동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체계적인 정책 모색 ④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⑤ 컨설팅 사업으로 변질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용-노동 인지 예결산제도로 재편 ⑥ 경영평가제도를 고용 친화적 방향으로 재편
김 철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정책 지원 조례 제정 ② 노동정책 비전 및 영역과 의제별 과제 수립 ③ 노동행정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



- ① 노동권익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조례에 근거한 노동정책의 입안과 집행
- ② 노동정책의 실효적인 입안과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③ 노동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실질적 역할 수행

2.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제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시행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표명하였음
 - 이는 일상적으로 해고와 입사가 반복되는 고용유연화와 저임금으로 노동을 고용하는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중단할 것을 결정한 정책으로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발이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정책은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포함
 -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 민간위탁기관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속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



-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부문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참을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채용시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음
-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채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천광역시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채용에서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전심사제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적정성을 판단 하도록 함
 - 형식적인 심사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채용부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전문기관의 설립과 비정규직 정책 내실화

- 비정규직은 분명히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정당한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로 인식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일 수 있으나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조례 제정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다양한 비정규직 문제의 통합적인 조사·연구가 가능해 짐
 - 이를 통해 토론회, 공청회, 강연 등 지속적인 의제로 삼아 대안을 만들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며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참여의 유도과 함께 정책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 출범한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가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지역의 노사정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되 지배하지 않는 비정규직 중심의 운영이 보장되는 비정규직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 비정규직전문기관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비정규직 문제 관련 상담, 교육, 법률서비스 및 컨설팅(부당노동행위,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관련 교육 등), 노동조합 구성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지원 등
 - 비정규직 청년근로자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상담 및 컨설팅
 - 연구조사 사업 수행 및 지원(비정규직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 노동자의 권익증대(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 기타 기간제 사용사유와 기간제한, 파견법 및 간접고용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적용, 4대보험 미가입 감독 및 노동조합가입지원, 노동자 건강권 등 안전한 노동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통합적으로 대응
- 비정규직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및 비율이 높은 대전광역시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인천광역시는 아직까지 비정규직전문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못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비정규직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현황 |

구분	비정규직전문기관	운영형태	예산(백만 원)	인력(명)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	-	20
경기도	경기노동권익센터	-	-	11
부산광역시	부산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한국노총)	180	3
대구광역시	대구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한국노총)	200	3
대전광역시	대전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민주노총)	200	3
광주광역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시민단체)	400	6

- 비정규직전문기관 운영 사례
 - 서울특별시 : 서울노동권익센터를 2014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와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2019년 2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노동자 휴게 공간 마련 지침,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노동정책 전담부서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

- 인천광역시의 노동정책 관련 조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3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파견 및 교육을 제외하면 2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담당하는 노동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담당인력은 4명에 불과한 실정임
 -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담당인력은 4명에 불과하여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문보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공무원인력 확보 및 전문관 도입으로 기획,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후속조치의 시행이 필요함
- 타 시도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조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 일자리 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에 22명으로 구성 및 운영 (인구 9,784천 명)
 - 경기도 : 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정책과에 14명으로 구성 및 운영(인구 13,045천 명)
 - 부산광역시 : 인권노동정책과에 16명으로 구성 및 운영(인구 3,446천 명)

- 장기적으로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노사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노동 정책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존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안) |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 구현”



Ⅵ 참고문헌 Ⅶ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공공부문, (2019.7.10.),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sp_sillae_gubun.jsp?gubun=001
- 고승한·이규용(2017), 「제주도내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 개선정책 연구 - 3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성희(2018), 「지방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경제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
- 김 철(2018),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4호.
- 김철홍 외(2017),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의제 발굴(소외노동 및 노동건강권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 노광표(2014),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1호.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2019),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보호 대책」.
- 최태림(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일자리 분야」, 인천연구원.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각 년도.
-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2019),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각 년도.
- 통계청(2019),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국가통계포털, KOSIS』 각 년도.
- 통계청(2019),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각 년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 「통계로 본 비정규직노동자」.